
	<h1>보 도 자 료</h1> <h2>배포시부터 보도 가능</h2>	
---	---------------------------------------	---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연금팀		
책 임 자	권대영 금융정책과장(2156-9710)	담 당 자	고영호 서기관 (2156-9711)
	이석란 연금팀장(2156-9695)		전수한 사무관 (2156-9717)
	최성일 감독총괄국장(3145-8300)		김종식 사무관 (2156-9692)
배 포 일	2015.6.18.(목)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7매

제 목 : 제5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 인터넷전문은행, 금년 9월부터 설립 신청 접수
- 연금 자산의 효율적 운용 등 연금과 금융권 상호 발전 방안 논의

1. 회의 개요

□ 2015.6.18.(목) 07:30 “제5차 금융개혁회의(의장: 민상기)”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개혁회의 위원 및 자문단 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렸음

■ 일시/장소: '15.6.18.(목) 07:30 ~ 10:00, 프레스센터 20F 내셔널프레스클럽

■ 주요 참석자

- 금융개혁회의 위원
- 금융개혁 자문단 위원 (자문단장, 분과반장 등)
-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 금융위 상임위원, 금감원 부원장보 등

■ 논의안건

- 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 6.18(목) 14:00 브리핑 예정
- ②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구축방안 → 6.18(목) 보도자료 배포 예정
- ③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6월넷째주 브리핑 예정
- ④ 정보처리 위탁규정 개정방안 → 보도자료 배포(6.9)
- ⑤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 → 브리핑(6.15)
- ⑥ 금융개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⑦ (토론안건) 연금자산 운용제도 개선방안(금융개혁 자문단 보고) → 붙임 참고

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다음 사항을 강조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은 IT와 금융의 융합이라는 핀테크 생태계 시스템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음
 - 그동안 금융개혁회의에서 결정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빅데이터 활성화 등으로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상황으로
 - 선진국에 비해 출발은 늦었지만 우리 기업의 저력을 생각하면 세계시장에 내놓을 만한 혁신적인 사업모델과 새로운 서비스가 빠른 시일내 출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
- 또한,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중시하는 핀테크를 육성·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전제가 바로 확고한 금융보안 구축이며,
 -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방안’은 금융기관 스스로 보안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큰 걸음이라고 언급
- 한편, 고령화에 따라 공·사연금의 규모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 국민의 적극적 노후대비와 금융시장의 발전 측면에서 연금 시장 개혁과제에 대한 이슈 제기가 필요하고 공론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월부터 중차대한 금융개혁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 외환제도개혁, 금융세제개선 등 협업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개혁회의에 보고·논의할 계획이며,
- 금융규제개혁도 Top-down방식과 Bottom-up 방식을 접목하여 유형화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앞으로 금융개혁회의 및 금융개혁 자문단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
- 인터넷전문은행은 23년만에 국내 금융시장에 신규은행 설립을 기대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으로서, 핀테크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산업의 한 획을 긋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
- 단계적인 추진전략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조기 출현을 유도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연금시장 문제도 심각한 노후빈곤 문제가 이슈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는 중요한 핵심과제라고 언급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금융시장에서 연기금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는 반면, 금융회사의 참여와 연금의 수익률은 저조한 상황이라고 발언
- 특히, 2020년이면 약 1,300조원에 달하는 공·사적 연금이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 ① 운용규제 개선 및 운용 방식 합리화를 통해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고

② 사적연금의 연금화를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강화 되어야 한다고 발언

- 아울러, 장기·안정적 자금인 연기금이 핵심 기관투자자로서 역할에 걸맞게 국내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마지막으로, 연금과제는 여러 부처와 연계되어 있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요청하면서,

앞으로 개혁회의에서도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이 은행산업의 활력과 혁신을 불어넣어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차별화된 영업전략 및 수익모델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
- 또한, IT보안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점검 및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시 금융회사의 굳건한 자율보안체계 구축이 전제되어야 하며,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도 필요하다고 언급

※ 붙임 : 금융개혁 자문단의 「연금자산 운용제도 개선방안」 주요 발표 내용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금융개혁자문단 자산운용·연금분과**(분과장: 성균관대학교 박영규 교수)는 공·사연금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검토해 발표하였고, 발표안을 바탕으로 개혁회의에서 '연금자산 운용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 금융개혁회의 중심으로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향 제시

1 주요 발표 내용 : 자문단 산하 분과에서 논의중인 내용

① **(현황)** 연금자산이 '14년 GDP의 56%(836조원)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확대되면서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노후소득안정이 중요해짐

○ 국민연금은 해외 연기금에 비해 수익률*이 낮고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금융시장·산업과의 연계성이 부족

* 주요 연기금 운용수익률('05~'14년 기준) :

5.8%(국민연금), 7.8%(캐나다 CPPIB), 8.0%(미국 CalPERS), 6.9%(노르웨이 GPFG)

○ 사적연금은 가입·연금화 유인 부족*, 안전자산 위주 운용으로 인한 낮은 수익률, 소비자 보호 미흡 등으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음

* 퇴직급여의 일시금 수령 비중 95.2%('14.4/4분기)

② **(국민연금 기금운용제도 개선)** 효율적인 연기금운용으로 수익률을 높이고, 금융시장·금융회사와 상호발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 **(운용방식 개선)** 위탁운용규모 확대, 위탁성과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및 위탁자 선정방식 개선** 등 위탁운용제도를 개선

* (예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최소요구수익률(hurdle rate)을 합리화,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벤치마크의 적정성 평가 등

** (예시) 위탁운용사 평가·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수수료 제안시 운용비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

- (투자 대상 확대) 이머징 마켓 등으로 해외투자를 다변화하고, 해외 투자시 국내 금융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

* (예시) ① 해외투자 위탁사 선정시 국내회사 공동 참여(Joint Venture, 공동GP), ② 해외위탁사가 국내위탁사와 전략적 제휴 통해 공동투자, ③ 해외투자 관련 위탁사 선정시 해외사와 국내사 별도 기준으로 구분해 선정

※ 국민연금 해외투자 위탁수수료('14년 약 4천억원)가 전체 수수료의 2/3이지만, 해외투자에 참여(약 160개사)하고 있는 국내사는 2개사에 불과

② (사적연금제도 개선) 세제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금가입과 연금수령을 유도하고 효율적 자산운용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

- (가입 활성화) 베이비부머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연금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 등 연금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 등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필요

* 미국의 catch-up policy 사례

- (연금화 촉진) 퇴직연금 자산의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IRP의 일부 인출을 허용하고, IRP와 개인연금간 효율적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세제 등 제도개선*

* IRP와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퇴직금 또는 본인 납입금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자기주도로 자산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실질 동일

- (통합관리) 연금계좌 관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투자전문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한 자산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 개인들의 연금 자산을 집합(pooling)하여 운용하거나 디폴트옵션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

- (소비자보호) 연금상품 개발, 판매, 운용, 공시 등 연금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사적연금법 제정도 제안

2 참석자 발언

- (국민연금) 국민들의 노후자금에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관련한 전문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자가 기금운용 의사결정에 참여할 필요
 - 해외투자에 있어 국가이익과 보다 합치되는 방향으로 투자 등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국내회사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 (사적연금) 사적연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입을 유인할 수 있는 강력한 세제혜택이 중요
 -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연금납입한도를 확대하고, 특히 50대 이상의 베이비부머에게 연금자산 축적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
 - 이와함께 연금이 노후소득원으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수익률 제고가 선행되어야 함